

## 캐나다는 왜 마리화나를 합법화했을까

“개인적으로 마리화나를 이용하는 이유는 많아요. 대마 종류에 따라 효과가 다른데, 어떤 것은 에너지를 넘치게 하고, 사회성을 좋게 해 모르는 사람들과도 대화를 잘하게 해 줍니다. 요가를 할 때 긴장을 완화하고 몸이 유연해지도록 해주기도 하죠.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고, 잠도 더 잘 자게 합니다. 해악이요? 글썄요, 뭐가 있나요? 마리화나 사용은 단순히 개인적 취향일 뿐이에요.”

캐나다인들은 왜 이토록 진보적인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개인의 선택권은 마약이라도 허용되어야 할까. 코카인 소지 혐의로 법정에서 쉰던 프랑스 작가 프랑수아즈 사강(1935~2004)이 자신을 변론한 ‘나를 파괴할 권리는, 모두에게 부여되는 것이 마땅한가. 국가는 개인 선택의 문제에 어디까지 간여할 수 있는 것일까. 2018년 10월 17일 시작된 캐나다의 실험, 마리화나(대마초) 전면 합법화에 대한 취재를 시작하며 품었던 질문은 이런 것들이다. 합법화 첫날 외신 사진에서 환호하는 캐나다인들을 본 이들이라면 마약을 합법화한 게 저렇게 환호할 일이나는 비슷한 의문이 들었을 법하다.

### 나를 파괴할 권리는 있나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진보적인가라고 생각했던 적은 또 있다. 북미대륙에서 손꼽히는 성소수자 페스티벌인 밴쿠버 프라이드 데이가 서울시청 앞 광장의 모습과 얼마나 다른지를 목격했을 때 그랬다. 도심의 교통을 통제 한 상태에서 행진이 진행되고, 주민들은 아파트 창문이나 현관문을 무지개 깃발이나 무지개 풍선으로 꾸며 프

라이드 데이를 축하했다. 한 교회는 더위에 지친 페스티벌 참가자들에게 무료로 시원한 음료수와 쉼 자리를 제공했다. 지역사회 전체가 프라이드 데이를 환영하고 즐기는 분위기였다. 성소수자 행진과 나란히 교회의 동성애 반대 시위가 대치하는, 증오의 광장이 되는 한국의 모습과는 확연히 대조적이다.

말하자면 캐나다는 신대륙의 네덜란드다. 네덜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리버럴하고 진보적인 국가가 아닌가. 이미 1970년대에 마리화나를 비범죄화하고, 2001년 동성혼을, 2002년 안락사를 합법화하며 호모사피엔스의 관습을 바꿔 간 나라. 캐나다 역시 그 뒤를 따라 동성혼(2005년), 안락사(2016년), 기호용 마리화나(2018년) 등을 합법화하며 사회적 용인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지 평범한 시민들의 생각이 궁금했다.

밴쿠버 시민들은 확실히 개방적이었다. “알코올 규제와 똑같이 마리화나를 규제의 틀 안에 두는 것”이라거나 “어차피 수십 년 동안 마리화나를 피우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막대한 수익을 범죄조직에게 안겨주기보다 정부가 관리하면서 흡리스나 싱글맘들을 돕는 데 쓰인다면 좋은 일 아니냐”는 반응들이었다.

### 100년의 금지, 50년의 저항

그렇다고 외신 사진처럼 환호만 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와 우려도 적지 않다. 사실상 캐나다에서는 너무나 오래된 논쟁거리다. 마리화나 합법화를 공약으로 내건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2015년 선거에서 이겨 95년간의 규제를 풀기에 이르기까지, 저항과 논란은 50년 가까이 지속됐다.



글\_김희원 | 한국일보 기자 hee@hankookilbo.com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졸업 후 서강대학교 과학커뮤니케이션협동과정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3년부터 한국일보 기자로 재직하며 사회부장, 문화부장, 기획취재부장 등을 지냈으며 올해의 여기자상, 과학문화상, 사이언지과학기자상 등을 수상했다.

캐나다에서 마리화나가 불법으로 금지된 것은 1923년. 사실상 중국 이민자를 겨냥해 아편을 금지하는 마약법이 제정된 후 마리화나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60년대 중반까지는 이 때문에 사법처리된 이들이 매년 20~30명에 불과할 정도로 사실상 마리화나 이용 자체가 미미했다. 그러다 60년대 반문화운동과 저항의 시기를 거치면서 대학가를 중심으로 마리화나 흡연이 크게 늘었다. 1964년 39명에 불과했던 마리화나 관련 법 위반 사범은 1972년 1만695명, 1977년 5만168명으로 급증했다. 마리화나 흡연이 주류 중산층의 이슈가 된 시점이다.

자연스레 1969년 토론토대학교, 요크대학교의 학생·교수 5,500명이 마리화나 합법화 청원에 서명하며 합법화 목소리가 불거졌다. 일부 보건 전문가들은 마약 사용을 치료해야 할 질병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수층, 사법기관, 도덕적 개혁운동가들도 완고했다. 1974년 마리화나를 식품의약품법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입법 시도는 연방경찰과 법무부 등의 반대로 무산됐고, 이후에도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 개정이 수차례 반복됐다. 처벌 위주의 규제와, 이에 대한 저항과 자구의 노력이 50년에 걸쳐 엮이려다치락하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온 것이다.

### ‘안전한 마약 사용’ 주장한다면

이런 와중에 1997년 발족한 VANDU(밴쿠버지역 마약 사용자 네트워크)라는 단체가 ‘안전한 마약 주사’를 위해 노력해 온 대목은 곱씹어볼 만하다. 마약이용자 스스로 단체를 결성해 자기 권리를 주장한다는 사실부터 “무슨 마약을 안전하게 하나”는 생각까지 VANDU의 존재는 모순덩어리로 보인다. 그런데, 따져보면 얼토당토않다고 치부하고 말 일은 아니다. 마약이용자들이 목숨을 잃는 많은 경우가 마약 자체보다 마약주사를 통해 에이즈, 간염 등 치명적 질병에 감염된 탓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회용 주사기를 무료로 나눠주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해 금지한 이후 마약이용자들의 에이즈 감염률이 올라 마약 이용을 낮추는 긍정적 효과는 없이 마약

이용자들의 사망률을 높이는 부정적 결과만 낳고 말았다. 과연 우리나라라면 이런 단체가 만들어져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국민의 42.5%가 마리화나를 접한 경험이 있는 캐나다와, 아직은 마약 사용이 극소수인 우리나라는 물론 상황이 다르다. 다만 캐나다의 선택은 우리나라에서 마리화나 아닌 다른 많은 것에 대입해 볼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임신, 출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담았을 때, “10대에게 임신과 동성애를 부추기는 거냐”는 거센 항의와 함께 학생인권조례를 무산시키려는 반대가 얼마나 거셌는지를 돌이켜 보자. 임신한 10대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논의 자체가 부도덕하고 불결한 것으로 치부돼 결국은 실질적 도움을 주지 않는다. 출산을 제고를 위해 그토록 많은 예산을 쏟아부으면서도, 미혼모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은 오래도록 외면돼 온 것도 마찬가지다. 동성애자나 페미니스트에게 쏟아지는 혐오는 어떨까. 조금씩 다른 문제지만, 모두 우리 사회가 쉽게 ‘비정상’이라는 낙인을 찍어 금기시하거나 차별을 당연시하는 이들이다.

### 한국 사회에 마리화나란

캐나다는 합법화를 통해 마리화나 이용자에게 씌워진 ‘인간쓰레기’ 낙인을 제거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해악을 낮추는 보건 서비스와 공공교육을 공론화 제도화하고, 과도한 처벌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길을 선택했다. 마약이 도덕적이거나 부도덕하다는 가치 판단과, 마약의 해악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를 따지는 것은 별개의 것이다. 네덜란드가 70년대 마리화나 소지, 판매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 이후 마리화나 흡연 비율이 늘지 않은 것도 예방, 치료 등 보건 서비스와 사회적 지원을 병행한 효과다.

그들이 그토록 앞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현실을 그대로 인정할 줄 알았던 덕분이다. 나와 다른 너를 ‘비정상’이라고 낙인찍지 않는 것이 그 출발점이다. **ST**